

광주·전남 펄펄 끓는다... 7일째 폭염 특보

온열질환자 속출... 닭·돼지 등 4500여마리 폐사 함평만·득량만 등 고수온 주의보에 양식장 '긴장' 당분간 폭염 지속... 무더위 쉼터 등 대책 마련 분주

광주·전남이 무더위로 '펄펄' 끓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6일 현재까지 7일 동안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가축 폐사가 잇따르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6일 광주·담양·나주·화순 4곳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으며, 전남 19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보더라도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광주 4명, 전남 42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난 30일 이후 온열질환자가 21명 급증하기도 했다.

가축 피해도 불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5일 까지 도내 19개 농가에서 4501마리의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양계 농가 4곳에서 1600마리의 닭이 폐사했으며 오리

농가 7곳에서 2400마리가, 돼지 농가 8곳에서 51마리가 폐사했다.

바닷물도 끓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일 함평만, 득량만, 가막만, 도암만, 여자만 등 전남지역 앞바다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령했다. 고수온 주의보는 수온이 28도 이상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되거나 전일 수온 대비 3도 이상 상승한 해역, 평년 대비 2도 이상 급격한 수온 변동을 보이는 해역에 발령된다.

이날 함평만 수온은 28.9도를 기록했으며, 득량만은 28.5도, 가막만은 28.4도, 도암만은 26.7도, 여자만은 27.9도를 나타냈다. 평년보다 3~4도 가량 높은 온도다.

올해들어 아직까지 전남에서 어패류가 폭염으로 폐사한 기록은 없으나, 고수온이 지속되면 양식장에도 집단 폐사 등 피해가 생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유입되면서 광주·전남 전역의 기온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면서 기온이 조금 떨어질 순 있으나, 비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올라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자치단체도 무더위 대책에 팔을 걷었다. 광주시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시민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동네에서 가까운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등에 무더위 쉼터 1548곳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무더위쉼터에 냉방비로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자율방재단 등 2080여명을 도우미로 지정해 매일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살필 방침이다.

극락교~송정역 구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 설치된 도로 살수장치를 가동하고 살수차를 운영해 열섬 현상도 완화할 계획이다. 횡단보도 근처에 설치된 파라솔 형태의 그늘막 462곳도 운영한다.

전남도도 재난도우미 7298명을 운영해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를 묻고, 무더위쉼터 7609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그늘막 1040개소, '쿨링포그' 12개소도 가동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더위는 잠시 잊고 6일 광주시 북구 중흥2동 주민센터 앞 벤치에서 어린이들이 그늘막에 영근 청포도를 구경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이날 광주는 최고기온 34.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졌다. /김진수 기자 jeans@

전남교육청 '교육 대개혁' 윤곽 나와

창의융합교육관·초중통합운영학교 재검토...농산어촌 프로그램 '정주형'으로 개선

전남교육청이 주민직선 4기를 맞아 목표로 하는 '전남교육 대전환'을 위해 전임 교육감의 주요 사업 상당수를 폐지하거나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교육 대전환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6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장석웅 전 교육감 시절 추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개선이나 검토사업으로 분류해 감대중 신임 교육감에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현재 40여개 주요사업 분석과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15개 사업을 개선 및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다. 창의융합교육관과 초·중통합운영학교는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전남교육청은 올해 8개 시·군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까지 22개 모든 시군에 창의융합교육

관을 구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준비위는 22개 시군에 일괄로 설치하는 것 보다는 지역별 특색을 살려 권역별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재검토 대상인 초·중통합운영학교(2020년 추진)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면 단위 30~40명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하는 '초·중통합학교 정책'이다.

준비위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은 교원인용과 교육과정 등이 다르다"며 "법적근거도 부족하고 조속하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민의 의견을 거쳐 현재 추진중인 학교는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추진방향을 개선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와 농산어촌유학 프로

그램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준비위는 "농산어촌 유학"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체험형에서 정주형으로 개선하고, '청소년미래도전 프로젝트' 사업도 교육력 향상과 전남교육만의 브랜드가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이어 "전남 교육 가족들과 소통 창구로 운영하는 전남교육청 누리집 '수위에 바란다' 게시판과 소통 메일로는 이날까지 53건의 정책 제안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주된 제안은 ▲학력 신장 ▲평생교육시설 발전 ▲교권 보호 ▲학부모교육 인증제 ▲교육청-대학 연계 교육정책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등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경관심의 지침 위배 '북동 재개발' 재심의하라"

시민단체, 광주시에 요구

광주시 대표 원도심인 북동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광주시 도시경관심의위원회 재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 경관심의 지침을 위배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월 졸속 운영된 광주시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는 무효다"면서 북동 재개발사업의 계획을 공개하고, 광주의 원도심 경관을 시민들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민선 8기 시작 이후에 경관심의위원회를 소집해도 되는데도 광주시가 시장 취임 공백기를 이용해 서둘러 진행, 조건부 의결을 결정했다"면서 "급하게 진행된 경관심의위원회는 경관심의를 제출해야 할 심의위원용 체크리스트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재검토 의결에 참여한 심의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심의는 22명의 위원들 중 13명만이 참석했다.

단체들은 이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소위원회로 넘긴 것은 최악의 경우 3명의 위원들의 뜻에 따라 급남로변 중심상업지역의 경관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부터 재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동 재개발 정비사업은 광주시 북구 북동수창초등학교 일대 13만6250㎡ 부지에 2224세대가 들어서는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아파트 21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심의는 22명의 위원들 중 13명만이 참석했다.

단체들은 이어 "경관심의위원회에서 7명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소위원회로 넘긴 것은 최악의 경우 3명의 위원들의 뜻에 따라 급남로변 중심상업지역의 경관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경관심의위원회에서부터 재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동 재개발 정비사업은 광주시 북구 북동수창초등학교 일대 13만6250㎡ 부지에 2224세대가 들어서는 지하 4층·지상 39층 규모의 아파트 21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 정지

12일부터 위반시 범칙금... '보행자 통행 우선권' 구역 확대

오는 12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지날 때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도중 당장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인근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면 보행자나 신호기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마찬가지로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 상가지역, 주택가, 통학로 등 이면도로에도 입면 '보행자 우선도로',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보장해야 하며 위반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지차경찰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광주 초등학교·유치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무신호 횡단보도에 노면표시와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교통섬 등의 횡단보도를 도로면보다 높게 설치하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교체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도 12일부터 1개월 동안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알릴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https://www.sunchang.go.kr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 농업도시 순창

비옥한 땅을 지키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순창의 친환경농업

사람과 환경을 위해 땅을 일구는 건강한 순창이 있습니다